

미국인 10명중 6명 “하루 벌어 하루 살아”



미국인 중 절반 이상, 10명 중 6명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데' 월급을 다 쓰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CNBC는 전날 미 최대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인용, 미국인의 58%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명의 직장인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paycheck-to-paycheck)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4월 61%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1년 전 54%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월급을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하고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산 결과는 렌딩클럽이 시장조사업체 PYMNTS와 함께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미 소비자 4,0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기타 경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41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미 직장인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8.6% 급등,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8,4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개설된 신용카드 계좌도 2억 2,900만 개에 달했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낙태권’ 제한에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로 인해 처방이 필요 없는 사후피임약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유통업체는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지난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유통업체들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배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낙태에 관한 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플랜C’인 낙태약과 플랜B인 사후피임약이 있다. 낙태약은 임신 10주 내로 낙태를 할 때 쓰이고,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72시간 내로 복용해야 한다.

약국 체인점 CVS와 라이트 에이드는 수요 증가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고객 1명당 판매 수량을 3알로 제한했다.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법원이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금지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트리거 조항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와 유타, 플로리다주에서도 트리거 조항을 문제 삼은 소송이 이어졌다.



▲ 약국 체인점 CVS와 라이트 에이드는 사후피임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했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트리거 조항은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06년 통과된 이 조항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소매업계 ‘환불은 OK, 반품은 NO’

월마트, 타깃 등 미국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말라는 ‘교육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가 쌓여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상 반품 받은 제품은 재평가를 거쳐 상태가 양호하면 이전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다. 또는 반품을 수리한 뒤 더 저렴하게 팔거나 재판매 업체에게 넘겨도 된다.

그러나 모든 반품 처리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판매 금액 1달러 당 소매업체의 순이익은 1~5센트지만, 반품 1달러당 소매업체의 처리 비용은 15~30센트나 된다.

월마트, 아마존, 로우스 등을 대신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반품을 처리해주는 업체 고티알지(GoTRG)의 스티브 톱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반품 없는 환불’



▲ 월마트 반품 코너. 사진=shutterstock

이라고 언급했다.

톱 COO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들어 고티알지의 고객사들이 이 정책을 100%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매업체들이 대폭 할인을 통해 재고를 소진하려 하지만, 할인이 높아질수록 우선 대량으로 샀다가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는 구매자가 늘어 결국 반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초	2 북			3 일	시	4 불
5 염		6 학	부	7 모			세
8 문	9 하	생		통		10 노	출
	후			11 이	레	적	
	12 상	록	13 수			가	
14 정	박		인		15 프	리	16 터
나			17 사	하	라		전
18 미	상	불			19 하	류	

숨은그림찾기 정답

